

민방위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14. 민방위기본법령상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상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국가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방위 물자 및 장비를 보급 및 비축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문 15.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「민방위기본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 연장의 심의와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는 중앙민방위협의회가 관장하는 사항에 포함된다.
- ② 교육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국가정보원장 및 소방청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에 포함된다.
- ③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, 민방위기획위원회 및 재난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.
- ④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문 18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물자·시설 등의 점검 및 비용의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·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시·도지사는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·장비 등에 대하여는 그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점검의 주기·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주민의 수 및 지형 등 지역 특성은 민방위 물자·시설 등의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.

문 19.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<보기>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 (甲, 乙, 丙, 丁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)

- 甲은 1990. 4. 20. 출생한 남자로서 2018. 2.부터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. 1. 3. 외항선을 운항하는 B 해운회사의 선원이 되어 그 해에는 6개월 동안 승선하였고, 2022. 2. 5. 승선하여 같은 해 8. 31.까지 승선하기로 되어 있다.
- 乙은 1996. 2. 10. 출생한 남자로서 2016. 3. 2. 산업대학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며 2022. 8. 졸업이 예정된 자이다.
- 丙은 1987. 7. 5. 출생한 남자로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후 법원행정처에 근무하고 있다.
- 丁은 1990. 9. 10. 출생한 여성으로서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인 C 회사에 7년째 근무하고 있다.

— <보 기> —

- ㄱ. B 해운회사는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하고, 甲은 B 해운회사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된다.
- ㄴ. 乙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2022. 4. 현재 민방위대의 조직 대상에서 제외되고, 2022. 8. 졸업하면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다.
- ㄷ. 법원행정처는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하고, 丙은 법원행정처에 둔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된다.
- ㄹ. 丁은 민방위대의 조직 대상자가 아니지만, 민방위 대원으로 지원하면 C 회사에 둔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.

- ① ㄱ, ㄴ
- ② ㄴ, ㄹ
- ③ ㄷ, ㄹ
- ④ ㄱ, ㄷ, ㄹ

문 20. 「민방위기본법」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민방위 대원 甲은 소속 기업의 해외파견으로 1년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.
- ㄴ. 의료분야의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민방위 대원 乙은 의료분야의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.
- ㄷ. 교육훈련 명령자는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원 丙의 결혼식을 이유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丙의 교육 및 훈련을 미룰 수 있다.
- ㄹ. 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의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민방위 대원인 丁은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.

- ① ㄱ, ㄴ
- ② ㄴ, ㄹ
- ③ ㄱ, ㄷ, ㄹ
- ④ ㄱ, ㄴ, ㄷ, ㄹ

문 21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읍·면·동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.
- ② 동원명령은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·군·구 및 읍·면·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,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, 동원명령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공고를 생략할 수 없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읍·면·동장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.
- ④ 동원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서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전달을 선택할 수 있다.

문 22. 민방위기본법령상 재해 등의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 대원으로서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, 그 부상의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.
- ② 교육훈련 중의 부상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읍·면·동장의 동원명령으로 민방위 대원이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에 따른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한다.
- ④ 민방위 대장은 「민방위기본법」 제29조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치료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읍·면·동장과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문 23.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와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제거를 직접 할 수 있다.
- ②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④ 응급조치권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 차량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 제한 또는 금지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·지역·기간·방법·사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,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
문 24. 다음은 「민방위기본법」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규정이다. ㉠ ~ 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제33조(민방위 경보) ①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㉠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·면장·동장 또는 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㉢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㉣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
- ① ㉠은 해당 읍·면·동에서만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- ②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㉡에 포함된다.
- ③ ㉢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④ 운수시설 중 「항공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화물처리시설은 ㉣을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문 25. 「민방위기본법」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ㄱ. 민방위 대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
 ㄴ. 타인을 고용하는 자가 피고용인이 민방위 대원으로서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
 ㄷ.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명령에 따른 주민의 피난을 방해한 경우
 ㄹ.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

- ① ㄴ
- ② ㄱ, ㄴ
- ③ ㄴ, ㄷ
- ④ ㄱ, ㄷ, ㄹ